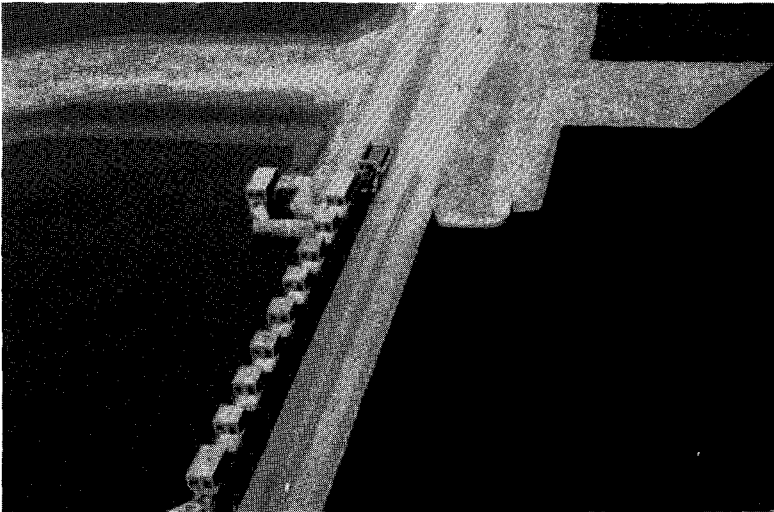


'96년 환경뉴스 결산

구자룡

동아일보 사회1부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뒤늦게 모두 4천4백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시화호를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시화호는 처음 조성공사 당시에 투입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정화작업을 벌이게 됐다.

지난해 큰 환경사고는 없었다. '95년 극성을 부린 남해안 적조 피해와 같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환경오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화호 오염, 여천공단 주변지역 오염논란, 대도시 오존주의보 발령 등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때라는 것을 인식시켜준 한해였다.

특히 대구 위천공단의 조성과 관련한 경남·북간의 대립은 단순히 지역적 갈등의 문제를 넘어 산업사회의 발전과 환경보전이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점을 던져줬다. 공단조성과 환경보전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96년 관심을 끌었던 환경현안들을 항목별로 정리해본다.

시화호 오염

지난 '87년 6월 첫 삽을 뜬 시화호 방조제 공사는 '94년 1월 12.7 km에 달하는 물막이 공사를 마침으로써 일단락 됐다. 총 공사비로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경기 안산시에 5천 28만평의 면적에 3억2천만톤의 인공호수가 조성됨으로써 서해안의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대역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시화호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화호 주변의 시화, 화성, 안산시 등 3개 시군에서 하루 49만톤의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유입 오폐수에 대한 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막이 공사가 끝남으로써 평균 2백일에서 1년정도 머무르는 물은 고여 썩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8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는 시화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면서 물막이 공사를 하도록 했으나 이러한 협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조사결과 시화호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중 36%인 하루 17만6천톤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후 외해로 방류되고 나머지 31만4천톤은 그대로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다가 하수관로가 깔려 있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하수도관로가 오점합쇄 상당량이 빗물관으로 흘러든 후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화공단지역 빗물관에서 나오는 물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31.4ppm이나 되는 것으로 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시화호로 흘러드는 5개 지천의 오염도는 모두 5급수를 훨씬 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뒤늦게 모두 4천4백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시화호를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에는 수질개선과 관련한 모든 방법들이 총동원됐다. 안산천, 시화유수지 등에는 산화지를 설치, 일정기간 머물게 함으로 자연정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반월, 동화, 삼화천 유역에는 인공습지를 조성해 역시 자연정화를 꾀하도록 했다. 시화호 내부에는 바닥토를 긁어내고 약품을 살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폭기를 시켜 정화작

업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시화, 화성, 안산 등에 오는 2001년까지 3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키로 했다. 3개 하수처리장이 완성되는 처리용량은 78만여톤으로 현재 발생량 49만톤을 넘는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일 당시에는 솔직히 수질오염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시화호는 처음 조성공사 당시에 투입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정화작업을 벌이게 됐다.

여천공단 오염논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지난 '94년 부터 2년여 동안 전남 여천공단에 대한 환경오염을 조사한 결과 「주민이주가 필요할 만큼 오염돼 있다」고 '96년 1월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은 위험수위에 있다고 KIST 보고서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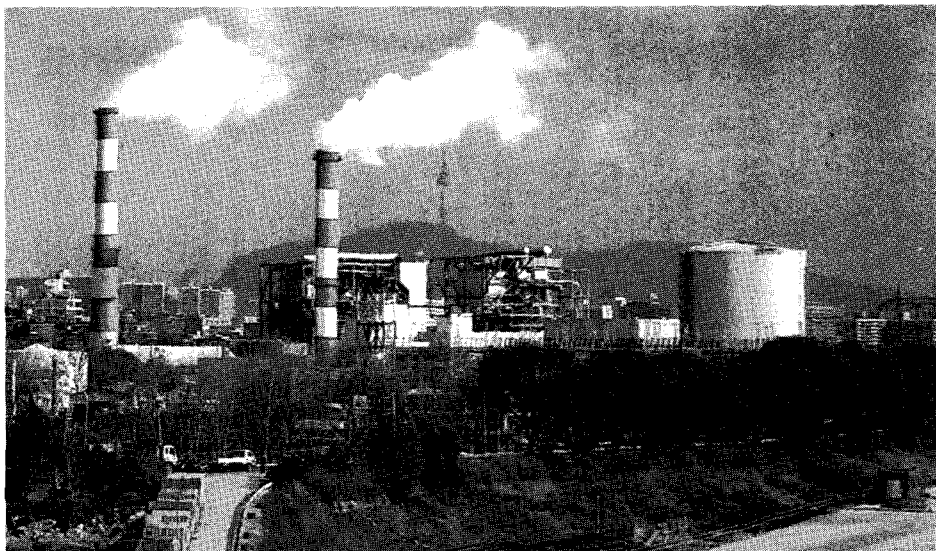
이에 대해 환경부는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현지 조사를 벌인 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KIST와 환경부의 조사결과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천공단 오염도, 파문으로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공단지역의 오염에 대해 그동안 당국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과 오염이 그다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며 주민이주대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두 기관간의 오염측정치는 벤젠의 경우 3백30배까지 차이가 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증흥동 등 일부 지역은 공단에 너무 인접해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결국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 여천공단 오염논란은 지난 30여년간 개발위주의 정책과정에서 지난 86년 울산 온산공단 주변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소홀히 취급됐다는 교훈을 남기게 됐다.

정밀조사를 벌여 주민이주여부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여천공단은 대기오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오염배출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됐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KIST와 환경부의 조사결과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천공단 오염도」 과문으로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공단지역의 오염에 대해 그동안 당국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여천공단 오염논란은 지난 30여년간 개발위주의 정책과정에서 지난 86년 울산 온산공단 주변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소홀히 취급됐다는 교훈을 남기게 됐다.

한탄강 폐수방류

지난 6월 임진강 상류의 한탄강에서 물고기 수집만 마리가 폐죽음을 당했다. 조사결과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신천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60ppm 이상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신천에는 염색, 피혁, 도금업체들이 모여 있는데다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중소 영세업체들의 폐수방류가 이미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환경부는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임진강 수질대책본부를 발족

시키고 폐수무단방류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또 신천유역에는 신규업체의 업주를 금지하고 기존 업체들도 새로 조성되는 공단에 집단 이주시키는 등 신천과 한탄강의 수질개선에 나섰다. 한탄강 폐수방류를 계기로 정부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무단폐수방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환경기사들이 최근 고등법원에서 법정구속됐는데 환경사범이 1심에서 벌금을 받고 풀려났다가 2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위천공단 조성

대구와 경북도가 3백만평 규모의 위천공단을 조성하게 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자 부산과 경남 등 낙동강 하류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경북도 등이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최신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면

낙동강 수질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남도 등은 위천공단이 조성되면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쓸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2백만평 규모로 위천공단을 조성하고 오는 2000년까지 5조원을 투입, 낙동강 수질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공단의 폐수를 무방류에 가깝게 처리하고 낙동강 하수처리장 등을 증설,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경우 2000년까지 현재 3, 4급수에 머물고 있는 낙동강 물을 2급수까지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도 주민들은 식발농성과 행정관서 점거농성 등을 해서라도 위천공단 조성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위천공단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수질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공단조성여부와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건교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첨단 공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입지를 어디에 할 것인가?

위천공단문제는 환경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과제로 새삼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 오존주의보

'96년 7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존주의보가 시행되면서 10여차례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산화물이 햇빛과 반응해 나타나는 오존은 후두염 등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 선진국형 오염물질.

오존주의보 발령이 거듭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음을 알게 했다.

현재 서울에만 1천만대에 육박하는 자동차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경우 우리의 생활환경과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게 돼 오존주의보는 「환경오염 적색경보」로 인식되고 있다.

음식쓰레기 반입금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11월부터 젖은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면서 수도권 시군구가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생활쓰레기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쓰레기는 매립지의 침출수를 다량 발생시키고 소각하는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생성시키는 주범이어서 감량이 절실한 것



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가 쓰레기 종량제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에 기여했다면 '97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가장 중요한 쓰레기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밖에 환경부 조사결과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불과 5~10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보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불러일으켰다.

'96년 3월에는 대통령이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환경관련 정책들이 경제논리에 밀려 번번히 축소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

오존주의보 발령이 거듭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음을 알게 했다.

현재 서울에만 1천만대에 육박하는 자동차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경우 우리의 생활환경과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게 돼 오존주의보는 「환경오염 적색경보」로 인식되고 있다.